

우리나라 인구 8년9개월 來 최소 지난달 1만명대 줄어 총 5135만명

행안부, 10월 전월비 1만5775명 ↓
2만346명 출생, 3만2510명 사망
이달 서울인구 930만명대 전망

올해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가 최근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크게 앞지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구 감소세가 2019년 12월부터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국가 인구는 8년9개월 사이 최소를 기록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인구는 5135만 명으로, 전월 대비 1만5775명 줄어 들었다. 이는 올해 들어 첫 1만 명대 감소인 데다 지난해 9월 이후 1년1개월 새 최대 감소폭이다.

가파른 내림세 속에 국내 거주민 수는 8년 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말 인구(5135만4226명)는 2015년 1월(5134만2881명) 아래로 가장 적었다.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2만346명인 데 반해 사망자 수는 3만2510명으로 자연감소분에 내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포기 등이 반영된다.

17개 주요 시·도별로, 서울(-7291명)이 전국 인구 감소분에 크게 기여했다. 부산(-2623명)이 그 뒤를 이었고 경북(-1839명), 경남(-1770명), 전남(-1472명), 전북(-1366명), 광주(-1239명) 등의 순이다. 거주민 수는 경



지난 1962년 서울 영등포-김포공항 간 국도연장 준공식의 모습. /국가기록원

기와 인천, 세종, 충남 등 4곳에서만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10월 말 기준 940만249명까지 떨어진 서울 인구는 11월에 930만 명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1980년대 초반 수준까지 회귀했다. 서울은 2016년 5월에 1000만 선이 무너진 이후 전국 거주민 수의 거침없는 내림세를 견인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40대 인구(795만 명)가 60대(762만 명)에 추월 당하기 일보 직전이다. 국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진입으로 60~69세 인구는 최근 수년간 급속도로 불어났다.

50대(864만 명) 비중이 가장 크고, 40대와 60대가 각각 2, 3위였다. 이어 30대(658만 명)와 20대(623만 명), 10대(466만 명)가 뒤를 이었다. 0~9세(336만 명)는 70대(394만 명)보다 적었다. 또 80대가 203만 명으로 전체 인

구의 4%가량을 차지했다.

우리 국민 평균연령은 44.7세로 집계됐다. 전남 거주민이 48.5세로 나이가 가장 많았고, 세종이 38.5세로 가장 젊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세이하 유소년 인구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11.5%로, 세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은 일본(11.6%)을 사상 처음 제치고 인구 대비 '아이들이 가장 적은 국가'가 됐다.

이 부문에서 남아공(28.1%)과 이스라엘(27.8%), 인도(25.3%) 등이 유소년 비중이 컸다. 38개 OECD 회원국 평균은 17.3%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YouTube logo and QR code for video content.

취약계층에 에너지요금 최대 59만원 지원

산업부, 난방비 지원·에너지 절감 대책
등유바우처·연탄쿠폰 지원액 확대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14.8만원으로

정부가 올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에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을 확대하고 도시가스요금은 4개월까지 분납을 허용한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올 겨울부터 어린이집도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신규 추가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OPEC 감산 연장 등으로 다시 상승하며 취약계층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우선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요금할인 등은 지난 겨울 특별대책 수준으로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동일하게 30만4000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을 포괄해 동절기 요금경감을 지난해와 같은 최대 59만2000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등유, LPG(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의 세대당 지원금액을 각각 64만1000원, 54만6000원으로 확대하고, 고효율가전 구매 지원은 올해 12만대에서 내년 14만8000대로, 주택 단열·창호 교체 등 주택 효율개선 지원은 올해 3만4300가구에서 3만6000가구로 각각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난방기, 히트펌프 등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 물량을 올해 2만9000대에서 내년 6만4000대로 두 배 이상 늘리고, 동절기 사용분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월별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전국 6만8000곳의 경로당에는 지난해 대비 8만원 증액된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000개소에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번 동절기부터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약 2만개소

의 어린이집이 포함돼 요금 감면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단가는 전년 대비 대폭 상향하는 등 절약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버스·지하철·아파트 승강기·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절약 메시지를 지속 홍보하는 한편, '온(溫)맵시 챌린지' 등 대국민 절약 캠페인도 추진한다.

한편, 국제 원유가격은 두바이유 기준 지난 5월 배럴 당 75.0달러까지 떨어졌으나 10월 89.8달러까지 치솟았다. 가스가격 역시 같은 기간 MMbtu 당 9.8달러에서 15.8달러로 올랐다.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복합 경제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계은행의 '원자재 시장전망'에 따르면 중동분쟁 확대시 국제유가는 최대 배럴당 157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새 정부 들어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불가피한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증가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기요금은 39.6%(+40.4원/kWh), 가스요금은 45.8%(+6.51원/MJ) 인상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국토교통부, 내년 1월부터 시행

업무용 승용 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번호판은 한 눈에 식별 가능한 연두색으로 정했다. 적용 시점은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이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다.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다.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해 결정했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이번 전용번호판 도입은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그간 연구용역,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 뿐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하기로 했다. /뉴시스



'이웃과 '사랑의 김치' 나눠요'
2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도시공사에서 열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노·사 김장 한마당'에서 공사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김장을 하고 있다. 김장김치는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들 150세대에 10kg씩 전달된다. /뉴시스

EU 심사 승인엔 美·日 허가 수월할 듯

>> 1면 '아시아항공 화물사업'서 계속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제정세 불안과 유가상승, 고금리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엔데믹 이후 화물사업 매출이 급격히 감소해 재무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화되는 기업결합심사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인수 주체인 당사의 재무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은 3년 전인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했다. 한국 등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고, 현재 EU, 미국, 일본의 심사 결과만 남겨두고 있다. EU가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하면 합병후 여객·화물 노선 독점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비교적 수월하게 합병에 대한 허가를 받아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DOJ)에 합병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대체 항공사로 에어프레미아를 앞세우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월에 미

국 법무부가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돈 이후 조원태 회장과 미 법무부 차관 등이 면담을 실시했고 이 자리에서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항공사를 찾아오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 차원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국제선에 처음 취항한 이후 현재까지 미주를 비롯해 유럽, 동남아, 일본 등의 국제선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주 노선 중 시애틀과 하와이 등 장거리 노선 운항을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쟁당국 심사도 중북 노선을 반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합병 승인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다. 일본과는 항공자유화협정을 맺은 만큼 일부 노선 및 슬롯 반납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경쟁당국과 시정조치안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정식신고서를 제출하고 내년 초 심사를 종결 짓는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아시아항공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분리 매각에 합의하면서 양사 합병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